

“특색 프로그램 운영해야”

도의회 교육위, 일괄적인 운영·획일화된 프로그램 지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8일 전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를 지향하고 진로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특색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내 6곳의 교육문화회관이 특색사업 없이 일괄적인 운영과 획일화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전북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희수(전주) 의원은 “우리 전북교육이 타시도보다 먼저 앞서갈 수 있는 길은 미래지향적인 아이팀과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진로진학과 직업탐색이 중요해진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프로그램 구성·운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육문화회관의 역할별 기능처럼 3D프린터 강좌, 로봇전문가 교육 그리고, 코딩교육 등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성 전

북혁신교육회관을 신설해 기존 교육문화회관 개념과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도내 6곳의 교육문화회관 중 수영장을 운영하는 곳은 3곳인데, 수영장 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인지하고 운영하라”면서 “특히, 수영장 물관리가 잘못되면 이용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기에 건강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김중식(군산) 의원은 문화회관별 도서자료와 관련해 “지역별 도서목록을 작성해 도서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교환·운영한다면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점자도서가 타 지역보다 적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구입으로 소외감없는 도서관을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다문화 교

육과 관련해 “다문화 2세대와 3세대에 대한 교육정책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또한, 교육문화서비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문화소의 계층의 독서교육과정을 더 충실히 하라”면서 “아울러, UCC영상 제작과정 프로그램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명지(전주) 의원은 “짧은 기간 소수의 인員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료가 타 기관에 비해 높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며 지역 특색이 살아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학생들이 주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달라는 주문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미련하지 않다”면서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교육문화회관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문건위, 전북개발공사 행감 진행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8일, 전북개발공사와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및 미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린 의원(남원)은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전라북도 경영평가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등급을 받았는데, 경영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제고방향과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추진 현황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며,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국가사업 공모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오 의원(익산)은 전북개발공사 추진사업별 당기순이익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특히 5년 공공임대주택 추진사업은 임대기간 5년 후, 주택구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추진사업보다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어 순이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있어야 공공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실적 관련, 장수와 임실 등 농촌지역은 다문화세대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배정이 각각 1세대밖에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다문화 가정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반영을 위해 특별분양 세대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군산)은 공기업형(공공기관제안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최근 3년간 타도는 공기업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사례가 많은데 비해 전북은 단 한 건도 없는 점을 지적했다. 각 지자체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관련 수요가 많은 만큼 전북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주도와 참여로 전북의 공기업형 도시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최영심 의원, “도내 대형마트서 전북산 농축산물 외면… 대책 마련해야”

도내 농축산물이 대형마트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전북산 농축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은 최근 농축산식품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가 도내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농축

산물을 현황 파악도 안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업체 수의계약률이 턱없이 저조한 것을 지적한데 이어 지역 농축산물 소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전북은 전체 인구의 1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해 우수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도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7위에 해당하는 것

은 그만큼 농축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판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전주에서 지난 2018년 10월 전주시 대형유통업체 9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며 “전라북도가 직접 도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농축산물 유통현황 파악부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교 있었던 것”을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익산 장점마을 사태 익산시는 책임지고 피해구제에 나서라” 전북도의회 익산시 지역구 김기영, 최영규, 김정수, 김대오 의원(왼쪽부터)은 18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익산 장점마을 사태,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책임을 지고 피해구제에 나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文대통령, ‘국민과 대화’ 생방송 준비 매진

靑 “국민 의견 청취하는 경청의 자리가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일정을 비우고 19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되는 만큼,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준비 상황도 챙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대통령께서는 오늘과 내일 공개 일정이 없다”면서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다 쓰실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MBC에서 방송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다.

오후 8시부터 100분간 공개회의인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 대통령은 사전 각본 없이 방송에 참여할 300명의 패널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MBC 측은 패널 선정에 있어서 ‘다양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고 대변인은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성별·연령·인구 비율 등을 반영해 골고루 (패널을) 선정했다고 MBC로부터 들었다”며 “노인·장애

인·농어촌·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해 (패널을)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성 차원에서 패널 구성과 질문 등에 대해 우리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MBC 측에서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역시 대국민 메시지와 함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이슈들을 총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화 방식도 아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데다 역대 대통령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인 만큼, 일각에서는 ‘기출문제 없이 시험 보는 모양새’라는 말도 나왔다. 고 대변인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분야에 대해 주로 다루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전 분야를 망라해 총점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질문만 던지실 수 있고 혹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견해를 물을 수도 있어서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경청의 자리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참모진 역시 기본적으로 예상 가능한 질문과 답변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깜짝 질문’이 나올 경우, 이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질문이 뭐가 나오지 모르니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도 모든 부분에 대해 내용적으로 민간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준비 상황도 막바지 점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신남방정책의 ‘중간결산’으로 규정하고 행사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식 회의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지만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은 23일부터 시작된다.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모두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회의 기간을 전후로 서울에서도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라센트 싱가포르 총리, 24일 하사남 불기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24일 오후 부산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4일부터 27일까지는 부산에 머물며 정상회의 본행사, 부대행사 6개국과의 정상회담 등을 소화한다. 27일 오후 서울로 복귀한 뒤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와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다.

/뉴스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